외국의 경제위기 회복사례 분석

- ◇ 경제위기를 맞은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과정 및 소요 기간 등의 사례를 분석* 한 용역 최종결과를 요약・정리하여 보고드림
 - * 각 경제모델의 특징을 대표하는 영국·스웨덴·러시아·태국을 선정하여 분석

< 요 약 >

- ① 경제위기는 주로 재정적자, 자산가격 거품 등 **대내적 문제**가 무리한 환율정책 등 **대외적 요인**과 **맞물리면서 발생**
 - o 주요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안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
- ② 위기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,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려움
 - o 위기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
 - o 특히,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구조는 본래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 - *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위기로 인한 고용·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
- ③ 따라서, 우리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보다는
 - o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
- ④ 아울러,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·제거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

I. 주요국 경제위기의 원인

- ◇ 경제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용, 효과적인 금융 감독기능 부재 등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시스템이 자본 자유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데 주로 기인
 - * 각 경제모델의 특징을 대표하는 '70년대 영국(영미형 강대국), '90년대 스웨덴 (유럽형 강소국), 러시아(자원부국), 태국(강소국)의 사례를 분석
- ① (영국) 소위 '영국病'으로 대표되는 과잉 사회복지, 공공부문 비대화 등 구조적 취약성에 1차 오일쇼크가 겹치면서 위기 발생
- ② (스웨덴) 표면적으로는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팽창이 유발한 부동산 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에 직면
 - o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계화·고령화에 따라 '연대임금정책, 적극적 노동시장'을 근간으로 하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하계가 노출되면서 발생
- ③ (러시아) 재정적자의 누적 및 단기부채의 급증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과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주로 기인
- 4 (태국) 표면적으로는 기초경제여건 악화를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환율 방어 정책이 97년 바트화 폭락을 초래
 -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외환 자유화에 따라 유입된 자본의 非효율적 투자, 자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누적,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크게 악화

Ⅱ. 주요국 경제위기 극복 대책

- ◇ 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 정책을 병행
- ① (영국) IMF 프로그램으로 거시지표가 안정세를 회복하는 가운데, 79년 출범한 대처정부가 규제완화, 노동개혁 등 근본적 개혁 단행
- ② (스웨덴) '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세계화의 논리를 수용하고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근원적인 복지모델의 개혁을 추진
- ③ (러시아) 변동환율제 도입·긴축재정정책 등 경제 안정화 대책과 함께 세제개혁, 투자환경개선 등 경제 개혁을 추진
- ③ (태국) IMF 권고에 따라 긴축재정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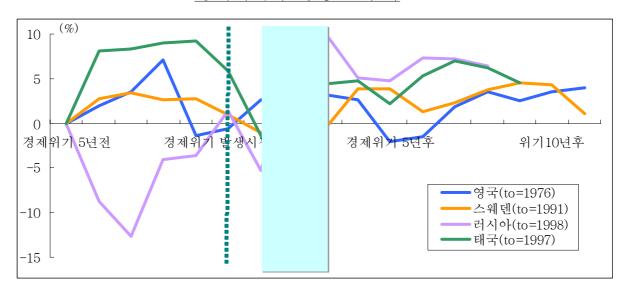
주요국 경제위기 및 극복 사례

| | 영 국 | 스웨덴 | 러시아 | 태 국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 모델 | 영미식/강대국 | 유럽식/강소국 | 자원부국 | 개도국 |
| 위기 시기 | 1976년 | 1991년 | 1998년 | 1997년 |
| 위기 원인 | 과잉 사회복지, 재정적자,파업 | 부동산버블붕괴 및 자산부실화 | 체제전환 구조적 문제, 재정적자 | 자본자유화, 환율정책 실패 |
| 극복 방법 | 노동개혁, 민영화, 대처리즘, 구제금융 | 연금·복지제도 개혁, 긴축재정, 기업경쟁력 강화 | 고유가 및 자원 | 환율제도변경, 금융 구조조정, 구제금융, |

Ⅲ. 주요국의 경제 회복 과정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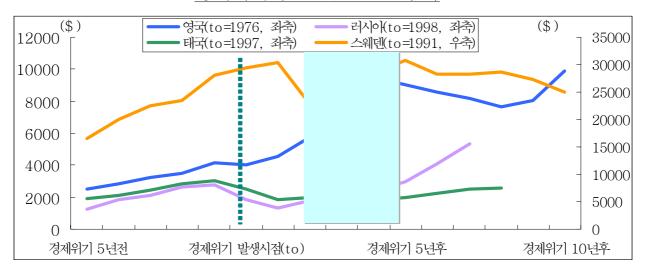
- ◇ 위기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,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려움
 - o 위기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
 - o 특히,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구조는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 - *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위기로 인한 고용·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
- ① 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부문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 (주로 1~3년 후 본래 수준으로 회복)
 - o (경제 성장률) 실질 GDP 증가율은 경제위기 1년~3년 경과후 양(+)의 수준으로 회복
 - 러시아는 산유국으로서 고유가의 혜택을 받아 1년만에 회복
 - 스웨덴은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회복 지연

경제위기와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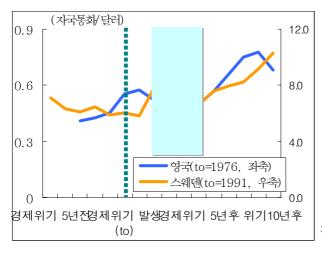
o (1인당 GDP)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1~3년 소요(태국은 6년 소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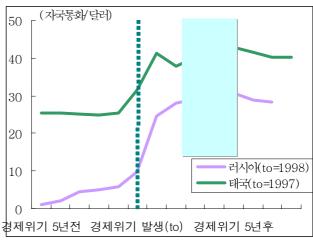
경제위기와 1인당 GDP 추이



o (환율) 위기직후 큰 폭으로 오른 환율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(절대 수준은 위기이전보다 절하)

경제위기와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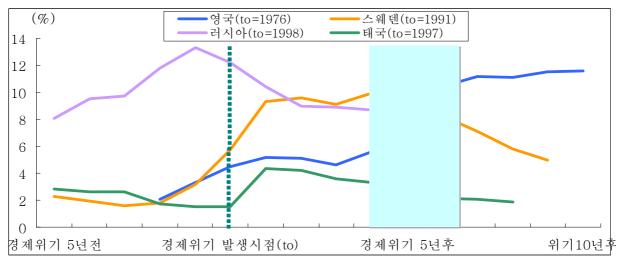




- ② 그러나, 위기이후 영업이익내 투자 등 **기업들의 투자성향 보수화**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- o 거시경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 3년차에 성장률 하락이 나타남
 - * 3년차 성장률(%): 스웨덴(4.0→1.3), 러시아(10.0→5.1), 태국(4.8→2.2)

- ③ 특히,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구조는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o (실업률) 신규고용 창출이 지체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잔존효과 *(hysteresis effect) 등으로 위기이전수준의 실업율로 회복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
 - * 잔존효과 : 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용가능성 저하, 노동시장의 內外部者(insider -outsider) 분리현상(노조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막음) 등으로 실업이 고착화
 - 영국은 5%대의 실업율을 다시 회복하는데 **20년 이상이 소요** 되었으며, 스웨덴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침
 - * 개도국인 태국의 경우 고도성장으로 5년만에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, 러시아는 고유가로 예외적으로 실업율이 급격히 감소(1년)

경제위기와 실업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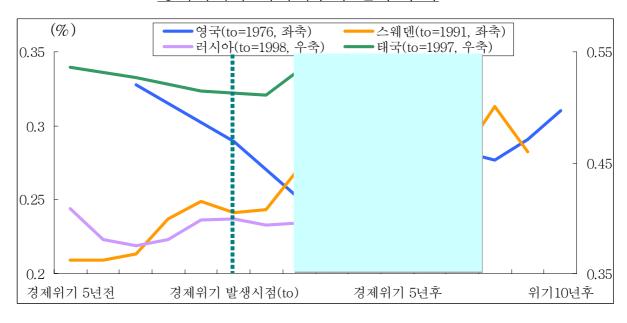
- o (소득분배)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본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모습
 - 기술진보, 세계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분배구조 악화를 경제 위기가 가속화는 계기로 작용
 - 특히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

• 영국의 경우 위기직후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된 '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득분배가 다시 악화

다만 이를 보다 본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 보완(블레어수상의 'Third way')

- · 스웨덴은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후,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· 러시아의 경우 체제 전환과 함께 악화된 소득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다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확대
- · 대국은 지니계수 기준으로는 소득분배의 평등성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욱 개선되었으나 도·농간 빈곤층 격차는 여전히 존재

경제위기와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



Ⅳ. 시사점

- ① 위기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,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려움
 - o 위기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
 - o 특히,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구조는 본래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 - *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위기로 인한 고용·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
- ② 우리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부문 안정성도 크게 제고되었으나
 - o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심화,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위기이전에 비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
 - o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계화·정보화·고령화 등으로 인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
 - * 지니계수 추이 : (97) 2.8 → (98) 3.2 → (00) 3.2 → (02) 3.1→ (04) 3.1→(05) 3.1
- ③ 따라서, 우리경제가 **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**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보다
 - o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·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
- ④ 아울러,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·제거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